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6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국민 권익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본격 시작 ('26.5.12.)
- ② "시민사회가 바라본 국민권익위의 정책은 어떤가요?" ('26.5.15.)
- ③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국민이 체감한 변화 살핀다! ('26.5.18.)
- ④ 고유가로 인한 민생과 산업현장의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해 드립니다('26.5.21.)
- ⑤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게 총 보상금 9억 1천여만 원 지급"('26.5.26.)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4)

국민 권익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본격 시작

-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증진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체 4곳 선정…체험형 교육, 지방의회 의정 모니터링 등 민간사업 추진
- 총 8,000만 원의 보조금 지원…보조금 집행 관련 실무자 워크숍 실시 및 연중 점검을 통해 보조금 관리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의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4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보조사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적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선정된 4개 단체에 각 2,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각 단체는 ▲시민 주도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윤리경영 교육, ▲학생 체험 청렴 연극, ▲지방의회 모니터링 등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 단체별 주요 사업 내용〉

선정 단체	주요 사업 내용
(사)광주시민방송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권익 증진
(사)한국공익법인협회	비영리단체의 윤리경영 역량 강화 교육과 청

	년층을 대상으로 한 ‘모금윤리 교육’ 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민간 기부 문화 조성
억압받는사람들의 연극공간-해	초·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청렴 연극을 통해 학생들이 연극 속의 갈등 상황에 몰입하고 청렴과 공정의 가치를 몸소 배울 수 있는 청렴 교육 추진
대구YMCA	광역 지방의회 및 기초 지방의회까지 꼼꼼하게 모니터링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지역사회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 국민권익위는 보조금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오늘 (12일) 선정 단체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워크숍을 개최해 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법과 회계처리 기준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연중 현장점검과 온라인 점검을 병행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 허재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자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민간단체가 가진 자율성과 전문성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청렴·권익 정책의 귀중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사회가 바라본 국민권익위의 정책은 어떤가요?”

- 국민권익위, 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최...주요 반부패 제도와 국민 권익구제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권익위 정책에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5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 권익구제와 반부패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번 간담회는 국민으로부터 보다 더 신뢰받는 국민권익위가 되기 위해 국민권익위의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7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고자 보호제도를 비롯한 반부패 제도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 국민권익위의 주요 역할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소통을 통해 수렴된 시민사회의 제언을 주요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담아내어 정책의 현장 수용성과 실효성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권익위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 국민이 체감한 변화 살핀다!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5.18.~5.29.)...
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증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오늘(18일)부터 5월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 기준 규정

- 신고, 제출 의무 -	- 제한, 금지 행위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⑥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⑦ 가족 채용 제한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⑩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 지난 20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는 인식과 이해도 제고를 통해 법 준수와 위반 방지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유권해석과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견고한 제도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지난 4년간 총 52회의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누적 약 7천 명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알려왔으며, 매년 업무편람, 유권해석 사례집 등도 제작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의 해석과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 매뉴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예방을 위한 지침서, 카드뉴스 등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법 위반 취약·빈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자료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 이번 설문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국민의 견을 경청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인지도, 법 시행의 효과, 공직자의 법령 준수 수준과 더불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 (개정안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허위 제출시 과태료 부과, ▲ 수의계약 관련 사적이해관계법인 제출·관리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및 조력비용 지원 등

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각각 증정할 예정이며 설문조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자칫 부패하거나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주는 안전장치”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제도운영과 법 개정 추진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유가로 인한 민생과 산업현장의 고충,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 21일 여수시 찾아…고유가 취약계층 등의 고충 상담
-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5월 21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구 분	전라남도 여수시
일 시	2026. 5. 21.(목) 10:00~15:00
장 소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3층 프로그램실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로 17(학동)]

-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함께 참여해 고유가 취약계층 등의 신용·채무 등에 대한 상담, 경영지원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자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고충은 민원으로 접수하고, 법령·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정책적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가능한 종합적인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유가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과 산업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게 총 보상금 9억 1천여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게 보상금 총 9억 1천여만 원 지급…신고를 통한 공공기관 수입회복 결정액 약 494억 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게 보상금 총 9억 1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494억 원으로 집계됐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2.1억 원, 22.9%), ▲공직부패(1.9억 원, 20.9%), ▲고용(1.6억 원, 18.0%), ▲복지(1.5억 원, 16.8%) 순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 >

분야	주요 신고내용
연구개발	▶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여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ㄱ씨에게 보상금 8천 5백만 원 지급
공직부패	▶ 불법하도급 업체 알선, 허위 준공검사 등을 대가로 공사업체에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을 신고한 ㄴ씨에게 보상금 4천 3백만 원 지급
고용	▶ 직원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ㄷ씨에게 보상금 5천 7백여만 원 지급
복지	▶ 장애인자립지원사업에서 임직원을 부정채용하고, 사업비를 허위 청구한 대표를 신고한 ㄹ씨에게 보상금 2천 7백여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비상상황 속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협약체결→기부(공공기관)→위기가정 발굴(위원회)→긴급 생계비 지원(사회복지협의회)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